조선대 의대 선발 '정부안 100%' 반영…전남대는 '장고'

조선대, 25명 증원 150명 확정…200명 전남대 '결정 못내려'
2025년 1500명 이상 증원 전망…국립대 위주로 증원분 감축

조선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명으로 정했다.

조선대가 정부 증원분 100%를 반영해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정원 200명을 배정받은 전남대의 증원 폭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는 최근 내년 선발할 의대 선발정원 150명을 골자로 한 대학 편제조정안을 법인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의대정원은 125명이었던 조선대는 정부에서 증원한 25명을 그대로 반영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정했다.

조선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사회 승인을 거친 상태여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하는 절차만 남겨 뒀다. 대교협은 대학 협의체로, 대학들의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한다.

조선대는 정부가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애초 정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애초 조선대는 교육부에 현 의대정원 45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배정 요구인원보다 적게 배정돼 정원을 줄여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50명으로 정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사립대도 조선대처럼 정부 증원인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추세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들도 대부분 최대한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 등 사립대와 달리 주요 국립대는 증원분을 대폭 줄여 내년 선발인원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남대 등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다른 국립대다.

전남대의 의대정원은 125명이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75명을 배정받아 일단 선발 정원은 200명이다.

전남대는 대학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학생들도 휴학계를 내고 복귀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등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증원인원을 확정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어렵다"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 등 의료 현실을 감안할 경우 쉽게 정원을 확정할 수는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배정한 인원을 일정 부분 반영해도 휴학 중인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찰에서 다도체험 28일 해남 대흥사 차문화체험관에서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린 '스님과 함께하는 제다체험' 행사에서 호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대 의대 29일 '비대면' 개강…온라인 강의

'집단 이탈' 사태로 학사일정이 중단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9일 개강한다.

26일 전남대에 따르면 학생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미뤄진 이번 학기 의대 수업이 29일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시작된다.

전남대는 학사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수업 일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1명 가운데 575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선대도 29일부터 의대 개강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출석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결정을 미뤘다.

조선대 의대는 재학생 725명 중 593명이 전공의 및 의대생 집단 이탈에 동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없다더니

광주환경운동연합 분석, 日 물고기 세슘 검출량 30배 증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시작된 지난해 후쿠시마 지역 농어·쏨뱅이 등 일본 바다 물고기에서 세슘 검출량이 3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단체)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4만5759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9%에 달하는 3628건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됐다.

세슘 137은 원자핵 분열 시 발생하며 방사능 오염 물질 중 위험성이 큰 물질로 분류된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불임, 암,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기 전인 2022년에는 바다 물고기에서 세슘이 ㎏당 1베크럴(Bq) 이하로 검출됐지만 지난해 검사 결과 후쿠시마현 산 농어, 쏨뱅이에서 30Bq/kg 이상 검출됐다. 장어(11Bq/kg), 갈가자미(8.3), 보리멸(7.7), 문치가자미(7.4)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최댓값이 증가했다. 또 민물고기인 곤들매기(160), 산천어(140)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 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 들어간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에서는 두릅(670), 메밀(430), 죽순(270)도 세슘 검출량이 많았다.

야생조수육의 경우 멧돼지고기(1500), 흑곰 고기(730), 일본사슴고기(200)도 오염도가 높았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피볼락(1만 8000), 가자미류(540)에서도 예외없이 세슘이 다량 검출됐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투기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총량을 밝히고 우리 정부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산 수산 수입금지 조치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청년 창업가 점포 임대료 지원
광주 서구 내달 8일까지 접수

광주시 서구는 다음달 8일까지 청년 창업가 11명을 모집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8개월 동안 임대료 최대 400만원(매달 최대 50만원),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자 2017년 4월 25일 이후 광주시 서구 지역에서 창업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창업가다. 단,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초기 창업가여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구 '가족돌봄·일자리 핵심 거점' 문 열었다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개관…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가 광주시 남구에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은 육아와 돌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활문화시설이다.

광주시 남구는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연면적 3449㎡, 지하 1층 ~ 지상 4층)를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 1층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이 들어섰고, 2층에는 언어 발달교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이 배치됐다.

3층과 4층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실과 작업장, 자활센터 생산품 홍보전시장 등이 마련됐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남구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자립을 도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